

野 “박대통령 2선 퇴진 안하면 하야 투쟁”

국정 공백 압박 투쟁 모드

민주 의총 강경발언 쏟아져

국민의당 집회 참여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0일 ‘촛불 민심’에 기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 압박을 이어갔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한 뒤, 청와대와 여권 일각의 국정 공백 위기 압박에 강경 투쟁 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12일 촛불 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다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국정 공백 상태에서 뚜렷한 전략 없이 지나치게 민심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촛불 집회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 카드에 기대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의 투쟁 외에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 총리 추천 카드를 무작정 거부한다면 국정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야권에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지도부는 “정의집회가 열리는 12일까지 대통령의 2선 퇴진이 없다면 정권퇴진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제는 하야 투쟁을 준비할 때가 됐다”, “12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



안철수 박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돌입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한다”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여기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여론이 여전히 폭발 직전이라는 점에서 장외집회가 대통령을 더욱 구석에 몰아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추미에 대표는 의총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고, 나머지 정치적 상상과 제안은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의총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별도특검, 대통령 2선 후퇴 및 총리 전권위임이 안되면 퇴진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상임대표 등은 이날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12일 촛불집회에 책임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창당 이후, 첫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12일 촛불 집회 참석을 결정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뚜렷한 해법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에는 당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민주총궐기 집회 합류 여부를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 비대위·현역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김영환 사무총장은 “장외투쟁이 창당정신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潘 국민의당 오면 공정한 기회 제공”

박지원 “與 안갈 것”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위 분들이 최근 우리 당에도 노크를 한다”며 “(국민의당에 온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KBS라디오 ‘공감토크’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고, 새누리당에 가서 박 대통령의 표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도 한때는 새누리

당 후보가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친박(친박근혜) 후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반 총장 주변 분들이 접촉해 오긴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다”면서 “다만, 주변 인사는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앞서 반 총장과 가까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답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는데 이런 당에 반 총장이 오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장병완 ‘광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국·광주 동남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산업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광산업 육성, 관련 법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모컴테크 최해용 대표는 광산업 육성을 위해선 법적 기반 필요를 역설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대곤 그룹장은 ‘기초소재와 응용 분야 육성의 토대가 있어야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룰 광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광 기술이 IoT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

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은희, 무등산 군부대 이전 회계 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의원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약칭 국방시설이전회계법) 일부개정법을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 이전회계법에는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기존 부지나 국방부 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어 이전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자원 마련 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이다. 특히 무등산 방공포대는 부지 자체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사유지나 사유지에서 자원 마련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소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상현 ‘트럼프 정부 한·미 관계 전망’ 세미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 외교-경제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외교분야,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경제분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노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

다. 이어 김홍규 야주대 교수와 허운서강대 교수가 참여,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최순실 예산’ 3500억원…문체부만 3400억원

각 부처 삭감 돌입…금태섭 “문화최순실 관광부” 지적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최소 3500여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총 3385억7000만원이었다.

이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 중 외교통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184억600만원이 편성됐다는 의미다. 최순실 예산 중 일부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깎거나 국회 상임위를 거쳐서 삭감된 상태다.

문체부는 애초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서 892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외통위와 농해수위도 정부안 중 의혹

이 제기된 사업 예산에서 62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 3500억원이 최순실 일당의 재산 부풀리기에 사용될 뻔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또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3300억으로 가장 많았다”며 “최순실은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한 부처를 본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문화최순실

관광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본인들도 모른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국민은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화장시절 장작더미다. 불길이크지기 전에 꺼뜨려야 한다”며 “2017년 정부예산은 단 한 톨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